

道, 중동정세 대응 '민생 안정' 예비비 43억 투입

택시·버스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30만원 726개 여행사 상품개발비 등 신속 집행

전남도가 중동 정세 지속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과 관광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상황 대응 민생시책'을 마련, 운수·여행업계 지원 등에 예비비 4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유가 상승 등 외부 경제 요인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먼저 연료비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급감한 운수 종사자의 생계 지원에 35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연료비 상승과 요금 동결로 이중고를 겪는 택시 종사자 6천243명과 시내·농어촌·전세·시외버스 종사자 5천302명 등 총 1만1천545명에

이해 연료비 부담은 커진 반면,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짐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난과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선제 조치다.

또한 전남도는 고환율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한 여행업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8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에 등록된 여행사 726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당 200만원의 체류형 상품개발비를 지원하며, 기존 300개 사였던 지원 범위를 전남 전체 여행사로 확대해 지역 관광 생태계 유지

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정은 도민 경제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가용 재원인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 취약 업계 종사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민생 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접수와 지급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다가오는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민생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4월 초에도 중동 정세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 공산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예비비 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닭고기 먹는 날 '동심달달' 행사.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닭고기 먹는 날 '동심달달'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음식을 배식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농민수당 내달 29일까지 지급

年 60만원...8천459농가 대상

광주시는 27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5월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광주선불카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최종 8천459농가로 광주시는 지난 2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5월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

지,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족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사용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단축했다. 2025년 농민공익수당의 사용 기한은 2년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광주시는 수당 사용 기간이 짧아진 만큼 농민들은 기한 내 잔액을 반드시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약가치 수당'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까지 3만2천352농가에 총 194억1천만원을 지원해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그동안 광주시 지역 농업인들이 전남과의 농민공익수당 지급 단가와 지급 대상 기준 차이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농민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6-3 지방선거 <3>

Q&A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5월21일~6월2일)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인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공직선거법 제60조 참조)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고나 의무 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보통문의 방법(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 대행 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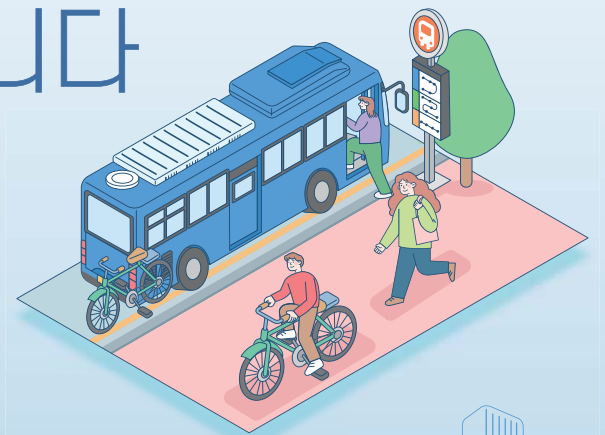
/자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